

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21. 10. 27.(수) 조간	배포일시	2021. 10. 26.(화) 10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이차웅 (044-215-2810)	담당자	김태순 사무관 (tskim07@korea.kr)
	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정책과 김영민 (044-215-8530)		주윤호 사무관 (yunoyuno@korea.kr)
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(044-202-7260)		유병현 사무관 (a3338@korea.kr)
	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조충현 (044-202-7570)		김진영 사무관 (campkim626@korea.kr)
	노동정책실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배영일 (044-202-7647)		황소진 사무관 (sjhwang44@korea.kr)

'21.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

요 약

- ◇ '21.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, 고용·산업 구조의 빠른 변화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+64.0만명 증가
 - '한시적' 근로자(기간제+비기간제)는 +56.4만명 증가, '시간제' 근로자는 +26.0만명 증가, '비전형' 근로자는 +20.5만명 증가
- ◇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관련 주요 근로 여건 지표는 개선
 - 비정규직 중 자발적 선택 근로자 비중(59.9%) 확대(+3.3%p), 월평균 임금(+3.4%), 사회보험 가입률(고용 +6.5%p, 건강 +1.3%p, 국민연금+0.6%p)도 상당폭 상승

◇ 금번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특징은 다음과 같음

- ❶ 기업 등의 채용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, 방역 관련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(+60.5만명)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 증가
- ❷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·회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복지, 교육업 등의 임금근로자가 큰 폭 증가
- ❸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등 고용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
- ❹ 인구구조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도 영향
- ❺ 비정규직 자발적 선택 비중, 임금 수준, 고용보험 가입률 등 비정규직의 주요 근로여건 지표도 상당폭 개선

⇒ 단순히 비정규직 증가 규모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 세부 증가요인, 근로여건 개선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

- 다만,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피해·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겠음

◇ 정부는 취업자수 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까지 위기 전 수준으로 '완전한 고용회복'이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배가하겠음

- ❶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간의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'단계적 일상회복'을 통해 고용시장 불확실성을 완화·해소
- ❷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적극 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

- * 상시·지속 업무에 대한 민간의 정규직 채용 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지속
- * 「기간제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」 확산 및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등 현장점검 병행
- *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
- * 공공부문이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토록 지도·지원

- ❸ 산업·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그간의 고용·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·강화

【 동 향 】

□ '21.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대비 +64.0만명 증가

* '20→'21.8월 취업자수(만명) : (비정규직)742.6 → 806.6<+64.0만명>

① '한시적' 근로자(기간제+비기간제)는 +56.4만명 증가, '시간제' 근로자는 +26.0만명 증가, '비전형' 근로자는 +20.5만명 증가

* 중복 응답 가능 → 한시, 시간제, 비전형 구분과 전체 비정규직 합계 불일치

② 여성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며 비중 상승

* 성별 증감·구성비(% , '20.8→'21.8) : (남자)44.9→44.3 (여자)55.1→55.7

* 연령별 구성비(% , '20.8→'21.8) : (15~19세)1.9→1.8 (20대)17.3→17.5 (30대)13.8→12.6 (40대)17.6→17.6 (50대)20.8→20.7 (60세이상)28.7→29.8

③ 산업별로는 공공행정, 예술스포츠여가 등은 감소하고 보건복지, 교육서비스, 사업시설관리 등은 증가

*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공공행정)△2.2 (예술스포츠여가)△0.2 (보건복지)22.8 (교육)8.5 (사업시설관리)6.6 (정보통신)6.2

④ 직업별로는 관리직·전문직, 단순노무직, 사무종사자 중심 증가

*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관리직)0.9 (전문직)17.6 (단순노무)22.1

□ 비정규직 중 자발적 선택 근로자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, 월평균 (6~8월) 임금, 사회보험 가입률 등도 상승하는 등 근로여건 전반 개선

① 자발적 근로자 비중은 전년대비 +3.3%p 상승하였으며 근로조건 만족, 안정적 일자리 등이 주된 사유

* 자발적 선택 근로자 비중(% , '20→'21년) : (정규직)86.2→ 88.3 (비정규직)56.6→59.9

* 비정규직 자발적 근로 사유 비중(%) : (근로조건 만족)58.1 (안정성)22.6

② 월 평균 임금은 176.9만원으로 +5.8만원(+3.4%) 늘어나며 증가 전환

* '19→'20→'21.8월 임금(만원) : (정규직)316.5 → 323.4 → 333.6
(비정규직)172.9 → 171.1 → 176.9

③ 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가입률이 모두 상승

*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증감(전년비, %p) : (고용)6.5 (건강)1.3 (국민연금)0.6

□ '21.8월 정규직 근로자는 임시·일용직 중 정규직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△9.4만명 감소

- 상용직 중 정규직 근로자는 +5.4만명 증가하였으나, 임시·일용직 중 정규직 근로자는 △14.7만명 감소

* 사회통념상 비정규직에 해당되나(주유원, 소규모 소매점 점원 등) 노사정위원회 합의('02년)에 따른 비정규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

【 평 가 】

□ '21.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, 고용·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+64.0만명 증가

- ① 기업 등의 채용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, 방역 관련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(+60.5만명)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 증가

- ②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·회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복지, 교육업 등의 임금근로자가 큰 폭 증가

*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(% , '21년) : (전체)38.4 (보건복지)52.7 (교육)43.3

* '21.8월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전체)54.7 (보건복지)24.4 (교육)7.1

- 보건복지, 교육업의 비정규직 증가(+31.3만명)가 전체의 약 50% 수준

* '21.8월 산업별 비정규직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전체)64.0 (보건복지)22.8 (교육)8.5

- 특히, 보건복지업은 방역 대응, 정부 일자리 사업 증가, 사회복지·돌봄 서비스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크게 증가(+22.8만명)

- ③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등 고용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

- 플랫폼 노동, 특수형태 고용 등 새로운 분야·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며 비전형 및 특수형태 근로자가 증가

* '20.8→'21.8월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한시)△17.7→56.4 (시간)9.7→26.0 (비전형)2.8→20.5

- '20.8→'21.8월 비전형 근로자 하위항목별(전년비, 만명)

: (파견)△1.8→4.6 (용역)△6.3→3.3 (특수형태)△3.0→6.2 (일일)14.8→5.9

- 한편,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간주되는 관리·전문직 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증가율(+16.4%)이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높았음

* '21.8월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관리·전문직)18.5 (사무직)7.7 (단순노무)22.1 (기능직)6.4
(전년비, %) : (관리·전문직)16.4 (사무직)9.8 (단순노무) 8.9 (기능직)9.4

④ 인구구조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도 영향

-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60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(+65.4만명)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+27.0만명 증가

*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(% , '21년)
: (청년)42.1 (30대)23.0 (40대)28.6 (50대)35.9 (60세 이상)73.7

□ 비정규직 관련 주요 근로여건 지표는 크게 개선

① 비정규직(+3.4%)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(+3.2%)을 상회하고, 특히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(+3.7%) 임금이 크게 증가

② '자발적 비정규직 선택' 근로자 비율(59.9%)이 '16년 이후 가장 큰 폭(+3.3%p)으로 늘어나 60%에 근접(역대 최고 수준)

*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비율 증감(전년비, %p)
: ('15)△0.4 ('16)3.9 ('17)△3.1 ('18)3.0 ('19)2.2 ('20)1.4 ('21)3.3

*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사유('21.8월)
: 근로조건 만족 58.1%, 일자리 안정 22.6%, 직장이동 11.9%, 수입 등 7.4%

③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, 고용보험 가입률(52.6%)은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(+6.5%p) 기록

*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(%): ('17)44.1 ('18)43.6 ('19)44.9 ('20)46.1 ('21)52.6

□ 따라서, 단순히 비정규직 증가 규모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 세부 증가요인, 근로여건 지표 개선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

- 다만,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피해·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겠음

※ 중장기 비정규직 추이 비교시 유의사항

-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'19년 조사에서 추가로 포착
- '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, 비정규직, 정규직 항목은 '18년 이전과 '19년 이후의 비교 불가

【 향후 정책방향 】

□ 정부는 취업자수 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까지 위기 전 수준으로 '완전한 고용회복'이 조속히 이루어도록 정책 노력을 배가하겠음

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간의 정책지원*을 지속하고 '단계적 일상회복'을 통해 고용시장 불확실성을 완화

* 디지털·그린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SW·AI·빅데이터 등 분야 민간·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구축·확산,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등 지속강화

②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적극 시정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꾸준히 추진

- 상시·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한 민간의 정규직 채용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·세제·고용구조 개선 등 지원 지속

* (재정지원)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임금증가액 일부, 간접노무비 지원
(세제지원) 정규직 전환시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1인당 최대 1,000만원 공제
(고용구조 개선)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, 개선방향 제시, 이행 지원

-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「기간제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」* 확산과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점검·시정

* ① 상시·지속업무 기준 명확화 및 상시·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 노력
② 기간제, 무기계약전환·간주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
③ 합리적 근로계약기간 설정 및 근로계약 만료 전 갱신여부 사전 통지

-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('17.7~)을 차질 없이 마무리*하고 고용안정 및 공공서비스 질 개선** 도모

* 정규직 전환 목표: 20.5만, 전환 결정: 20.2만, 전환 완료: 19.6만 (명, '21.6월 기준)

** 노사가 참여한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·수당기준 마련 → 차별해소, 처우개선 추진

- 공공부문이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토록 지도·지원

*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 발표('19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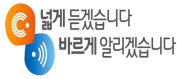
- 민간위탁관리촉 설치, -단계별 권고사항 제시(모집공고·선정, 계약체결, 재계약계약해지 등)

③ 산업·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그간의 고용·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·강화

-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플랫폼 4법*의 입법 등도 적극 지원하여 법·제도적 보호기반 구축

* 「플랫폼 종사자 보호법」(플랫폼 및 소속업체 책임 규율), 「직업안정법」(플랫폼 신고의무), 「고용정책기본법」(국가지자체 정책 추진 근거), 「근로복지기본법」(복지사업 등 지원근거)

-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전속성 요건 폐지 등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